



국정조사 돌입 지난 30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국조위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당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명령’ 정호성 녹음파일 요구 봇물

검찰, 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입건 수사 중

최경희 이대 전총장 정유라 입학 특혜 압력행사

국정조사 첫 날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지난 30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은 의혹을 받는 우병우(49) 전 수석도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 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대통령 주변 인사인 최씨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전 차관이 올해 3월 최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 대신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고 것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54) 전 총장, 남궁근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제적 혐의도 드러났다.

최 전 총장 등은 2014년 9월 체육특기생 입학사정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의 심사를 방해하고, 올해 4월 정씨의 지도교수를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작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씨가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들에게는 정씨에게 높은 학점을 주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이창재 법무차관은 최순실씨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호성 녹음파일’을 국정특위에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녹음파일의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시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하아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김주현 대검 차장·박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불출석 정회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중언 출석이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넌뛰는 與 탄핵표

“정족수 이미 확보” vs “예측 어렵다” 팽팽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요구한 ‘임기단축을 위한 국회 논의’를 거부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을 서두르기로 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의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서는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 수인 172명에 새누리당 의원이 최소 28명 가세해야 하는데,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주장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야당의 ‘탄핵 연대’가 굳건한 상황에서 ‘172석+a’의 변수는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서 28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비주류측으로 구성된 비상사국위원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비상사국위는 지난 25일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40명으로 확인됐다”고 숫자를 공개한 바 있다. 뒤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가결 정족수 확보는 기정사실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언급한 뒤 비주류의 단일 대오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외의 결과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김경진 “청와대, 최순실 증거 인멸 주범”

암수수색 정보 사전에 흘려 증거 없애고 말쑥한 정황

“대통령 기밀유출 수사 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최순실의 증거 인멸이 통상 검찰보다 빨랐고, 암수수색 구체적 일정까지 새나간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정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지난 30일 “조직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지시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암수수색을 벌였지만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낸 롯데케미칼(45억원)·롯데캐드(5억원)



등 6곳의 계열사들은 10일 암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K스포츠재단은 6월 9일~13일 70억원을 롯데 계열사 6곳에 순차적으로 반환했고, 이들 계열사는 지원금을 모두 돌려받은 바로 다음날인 14일 암수수색을 당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로부터, 안중범 전 수석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가 수사 초기 진술내용을 입수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탄핵·총리 선출…빠격대는 2野

박지원 총리 선출 제안에 추미애 난색…경제부총리 임명도 이견

국정 농단 파문 정국에서 야권의 양대축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불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포용력과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는 총리 선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총리 선출 문제를 꺼내자 추 대표가 “총리 얘기는 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이 “추 대표 한 사람만 총리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자 추 대표는 “저뿐 아니라 국민도 그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만 국민이 있는 것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려 회동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든 전언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선(先)총리 후(後)탄핵’을 주장했다지만 민주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야권 공조를 위해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이뤄진 야3당 대표 회담에서도 추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임명을 놓고도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임 내정자의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에 동의했으나 추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를 설득, 임 내정자 임명을 추진했으나 추 대표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임 내정자 임명을 통해

경제와 어려운 민생은 행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임 내정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가 지난 14일 민주당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추진하면서 박 위원장과 관계가 크게 틀어진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대표와 박 위원장의 불화 배경으로 탄핵 이후의 정국을 보는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박과 친문 진영을 제외한 제3지대에서의 정권창출을, 추 대표는 민주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두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

반기문 귀국후 통합 행보…정진석 “대세론은 없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올해 12월 임기를 마친 후 귀국하면 가장 먼저 국민통합 행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원수 유엔사무차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반 총장은 귀국하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예방해 지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업무에 대해 말씀드릴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또 “국립묘지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도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국 후 좌우 진영을 넘어선 국

민통합 행보를 우선순위에 둬으로써 지난 10년간 국내를 떠났던 공백을 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대선에 뜻이 있다면 이제 반기문 대세론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5~40%에, 여당이 원내 과반이면서 대선 후보가 없을 때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 총장과 같은 총정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정계 입문 전 일간지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반 총장과 가깝게 지내왔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